

# OECD EPC WP1 회의결과

---

## I. 회의 개요

- 2011.10.20(목)~21일(금) 경제정책위원회 실무회의(Economic Policy Committee Working Party 1)가 개최
  - 위기기간 동안의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소득분배 정책 및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
  - 기획재정부 유형철 과장(수석대표)· 박선영 사무관· KDI 김성태 부연구위원 등 참석
  - 회의결과는 '12.4월 구조개혁보고서에 반영될 예정

## II. 회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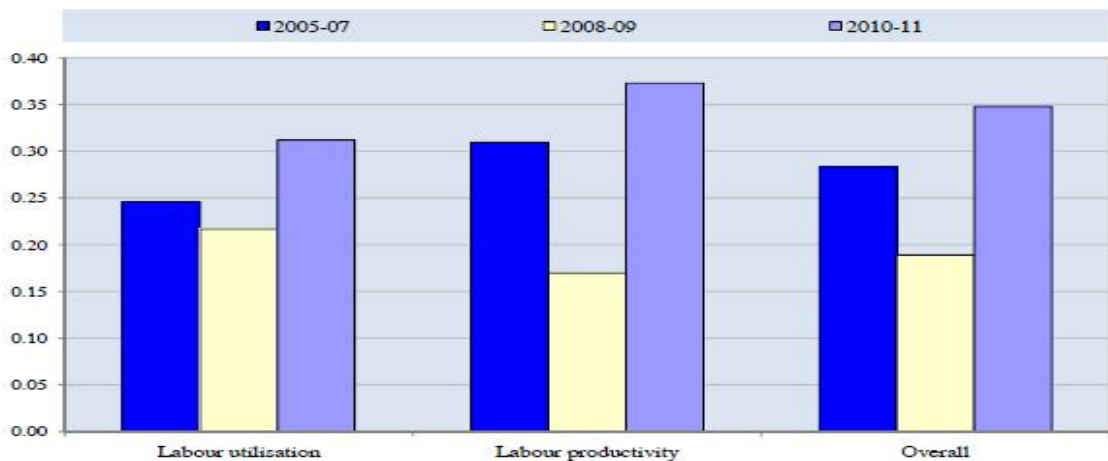
### 1. 위기 기간의 구조개혁 정책

#### <OECD 사무국 주요 내용>

-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2005년 이후 매년 각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추진 상황을 평가
  - 금년에는 위기기간동안 각국에서 추진한 주요 구조개혁 정책의 이행실적을 점검

- 위기 초반(08~09)에는 거시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면서, 구조 개혁 진행이 더디었으나, 회복세가 시작된 이후(10~11)에는 위기이전(05~07) 보다 구조개혁이 빠르게 진행
  - 이는 재정 건전화 압력으로 인해 은퇴 및 복지시스템 · 공공부문 등에서 구조개혁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Figure 2. Evolution of responsiveness to *Going for Growth* recommendations across the OECD<sup>1</sup>



- 위기기간 동안 "노동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
  - 근로에 대한 세금을 축소(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 최저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연금혜택 축소 등 은퇴시스템 개혁(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 구직활동 지원, 교육훈련 제공, 재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추진(미국, 핀란드, 스페인 등)
  - 대부분 국가에서 위기 초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확대, 실업 급여 혜택기간 증대 등 실업 혜택 시스템(unemployment benefit system)을 일시적으로 강화

- 다만, OECD는 동 제도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시장이 회복된 이후에는 실업 혜택 수준과 기간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권고
- 잡세어링 등 단기간 노동 프로그램(Short-time working schemes)은 급격한 노동시장 침체를 방지하고, 인적자원 퇴출 방지로 중장기적 노동활용도를 제고
  - 다만, 장기적으로 퇴출되어야하는 일자리 보전, 임금압력 상승 등의 비효율성(deadweight loss)도 일부 발생
- 한부모 소득지원, 보육시설 확대, 육아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 제고(한국, 독일, 스위스 등)
- 정규직 퇴직금 축소(네덜란드, 그리스, 스페인)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을 강화(한국) 등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
-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제도 신설(그리스 등) 등 최저 임금 시스템 개혁을 통해 저기술 노동자 활용도 제고
- 위기기간 동안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
  - 경제전반의 규제 철폐를 통한 상품시장 개혁
    - 등록·허가절차의 단순화(벨기에, 한국), 파산절차 단순화(체코), 공공부문 계약의 경쟁력 강화(덴마크) 등 추진
    - 소매업 가격규제(프랑스), 판매 규제(벨기에), 개점시간 규제(포르투갈, 덴마크) 철폐 등을 통한 유통소매업 경쟁력 제고
    - 위성방송 산업 등 FDI 규제 완화(한국, 캐나다) 등도 추진
  -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을 소득보전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농산물 분야 구조개혁 추진(유럽, 스위스)

- 교육시스템의 질과 효율성제고 및 교육 불평등 완화를 통해 인적자본 강화(칠레, 뉴질랜드)
- 재정건전성 강화와 성장친화적인 조세 개혁이 추진
  - 면세 축소(일본), 소비세원 확대(한국) 등을 통한 세원 확대와 근로세(독일, 핀란드) 및 법인세 감세(캐나다, 이스라엘) 등 추진
- 향후, 재정건전화·고용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개혁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
- 노동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업 급여(unemployment benefit) 개혁을 추진
- 비정규직·정규직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등 노동시장 이중성을 개선
- 세원을 확대하고, 세금부담을 고용·성장관련에서 재산·소비·환경 등으로 이전하는 방향의 조세개혁을 추진
- 유통업·전문서비스 분야 등 단기간에 노동을 창출시킬 수 있는 상품시장 개혁

#### <주요 논의 내용>

- 회원국 대부분은 위기기간 동안 구조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사무국 보고서가 시의 적절했다는 평가
- 다만, 덴마크·벨기에 등 일부 대표는 위기가 구조개혁을 촉진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 구조개혁 정책이 위기시 단기적인 경기침체를 유발할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따라서, 스웨덴 대표는 각국이 구조개혁 정책이 장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정책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time-line**을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또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국가대표들은 구조개혁 정책이 재정건전화 노력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고 평가
- ECB 대표 등은 이에 동의하면서, 각국이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고용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금번 재정위기가 각국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평가
- 다만, 덴마크는 연금 및 은퇴시스템 개혁 등 일부 구조개혁 정책은 정치적인 이슈인 만큼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
- 한편, 아국대표는 구조개혁 정책이 사회적 환경 및 추진 속도 및 지연가능성, 정책의 중요도 차이(major or minor) 등으로 인해 구조개혁을 일괄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 프랑스 대표도 재정 등 각국의 상황이 다른 만큼, 사무국의 일률적인 권고는 어렵다고 지적
- 이에, 사무국은 상기 분석 및 평가·권고가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
- 사무국은 주요 논의내용 및 각국의 최근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12.4월 구조개혁보고서(Going for growth)를 출간할 예정
  - ※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이행실적은 별첨

## 2. 구조개혁의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OECD 사무국 주요 내용>

-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단기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 OECD 사무국에서는 이론적(DSGE 모델)·경험적으로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 결과,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다르나, 장기적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총수요와 고용 증대를 유발할 가능성
- 구조개혁 정책은 신뢰효과, 소득효과, 자산효과의 경로로 총수요에 단기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①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 단기적으로는 해고가 용이하여, 고용·총수요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나, 중장기적으로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져 고용 증대 효과
  - ② (실업급여 축소) 해고비용은 동일한 상황에서 구직률을 제고하여, 단기적으로 실업률 감소 및 총수요 증대 효과
  - ③ (노동정책 활성화) 구직활동 지원 등으로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소비·총수요가 증대
  - ④ (진입장벽 축소) 새로운 기업 탄생으로 GDP는 증대되나, 단기적으로 투자(저축) 증대로 소비는 감소하며, 일자리 창출보다 해고가 빨리 이뤄지며 실업이 소폭 상승

- 따라서, 진입장벽 개선과 노동정책 활성화 등 다양한 구조 개혁을 종합적으로 조합(package)·활용하면, 단기적으로 GDP 증대 및 구조개혁에 따른 이행비용 축소 가능
- 다만, 각국의 제도적 상황과 거시경제 정책에 따라 구조 개혁이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
  - 가격·임금 등 명목변수가 경직적인 경우, 효과가 느리게 발생하는 반면, 진입장벽이 낮거나, 개방도가 높은 경우에는 효과가 증대
- 각국의 경험에 근거한 구조개혁의 경제적 효과도 모델과 대부분 일치
  - 실업급여 축소는 고용회복효과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발생하나, 고령층에게는 부정적인 고용효과 발생
  - 다만, 정규직 보호정도 완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용회복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퇴직연령 개혁은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
  - 노동정책 활성화(ALMP)는 단기적으로 고용증대효과가 존재하나,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가능성
  - 근로세 감세는 실업률을 단기간에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중기적으로 여성과 젊은층의 고용을 증대
  - 상품시장개혁은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증대시키나, 기업 지출 감소로 투자와 GDP는 감소
  - 다만, 전반적으로 성장과 고용이 잠재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구조개혁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짐

## < 주요 논의 내용 >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최근의 재정건전성 추세로 거시경제 재량(room)이 축소된 상황에서 사무국의 구조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 분석에 대해 의미있다고 평가하면서도,
  - 아국대표를 포함한 다수 국가대표들은 사무국의 분석모델(DSGE) 한계에 대해 지적
    - 스웨덴·스페인 대표 등은 모델의 제약조건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내생성 문제를 포함하여, 유동성제약과 환율 등 대외 거래 부문이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 등을 언급
  - 이태리 대표는 동태적(Dynamic) 분석을 하는 DSGE 모델이 장기적인 영향 분석에는 효과적이나, 단기적인 분석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
- 또한, 대부분 구조개혁이 이뤄지는 사회경제적 여건 및 구조개혁의 추진 속도에 따라 경제적인 효과와 비용이 다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
  - 호주·노르웨이 대표는 저소득-고소득 근로자, 고령층-청년층 등 국가 내에서도 계층간 미치는 효과가 다르고,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
- 사무국은 주요 논의내용 및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12.4월 구조개혁보고서(Going for growth)를 출간할 예정

### 3. 녹색성장과 구조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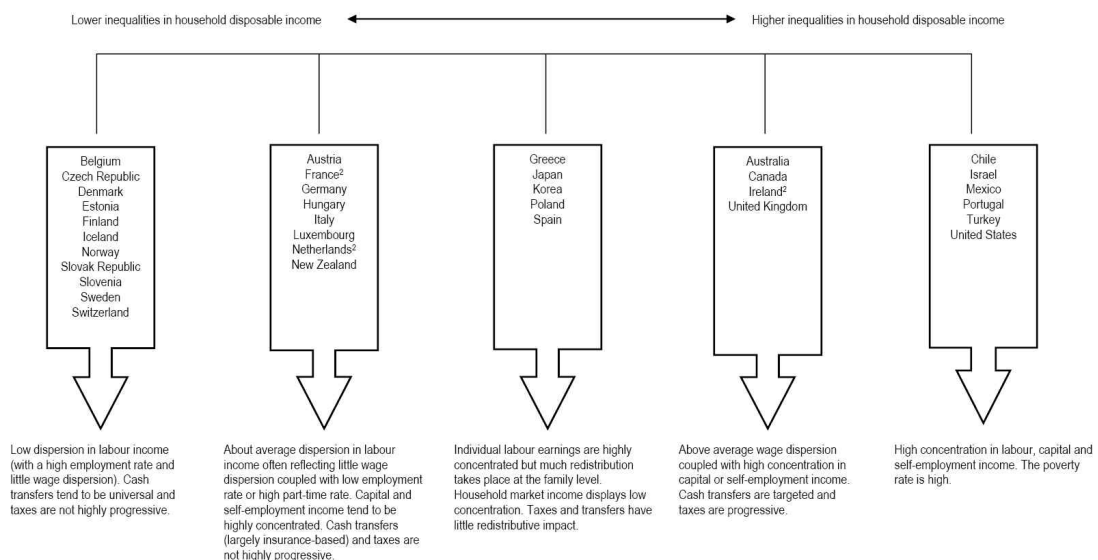
- 향후 OECD 사무국은 지난해 MCM에서 결정한 녹색성장 주류화 추세에 부합하여, 구조개혁 보고서에 녹색성장을 주요 과제로 다루기로 하고, 그 방식에 관한 의견을 수렴
  - (A)녹색성장을 구조개혁 보고서에 특별챕터로 채택하는 방안, (B)1인당 GDP로 평가하는 구조개혁 보고서의 틀을 유지하되, 구조개혁 정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 (C)구조개혁과 녹색성장을 병행(parallel)하여 평가하는 방안 (D)사회후생(social welfare)측면에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방안 등 4가지 옵션을 제시
  - 옵션 (A)(B)는 분석틀은 단순하나, 녹색성장의 주류화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반면, 옵션(D)는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나, 구조개혁과 녹색성장을 병합하는데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
- 대부분 회원국은 녹색성장과 구조개혁 정책을 사회후생 최대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이상적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데 동의
  - 아국대표는 녹색성장은 녹색기술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단순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있는 옵션 B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사무국은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기적으로 구조개혁과 녹색성장을 병행하여 평가·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의 범주를 확장시켜, 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 4. 소득분배와 성장

### <OECD 사무국 주요 내용>

- 5개 그룹으로 비슷한 소득 불균형 패턴을 보이는 나라끼리 분류한 결과 우리나라는 중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불균형 정도가 OECD 평균보다 상회하는 나라일수록 자본 및 노동의 집중도가 높고, 자영업자 소득이 높으며, 빈곤율 또한 높게 나타남(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포르투갈, 터키, 미국).
- 소득 불균형의 정도가 OECD 평균 수준인 나라는 실업률은 높지만 노동임금의 격차는 크지 않으며 단순한 현금이 전 구조를 보임(벨기에 및 북유럽 국가 등).

[그림 1] 소득분배 정도에 따른 국가별 구분



- 노동수입 불균형(근로자간 소득 불균형)과 노동소득 불균형(전체 경제활동인구간 소득 불균형, 실업자 포함)은 임금수준, 노동시간,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 등에 따라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국가별 소득 불균형은 주로 정부 정책과 제도적 환경에 기인
  - 또한, 과학 변화나 세계화도 소득 불균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교육수준)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과 소득 불균형간의 이론적 관계는 불분명하지만,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촉진하는 정책들은 소득 불균형을 개선할 가능성
-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낮아질수록 소득 분포가 넓어져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다만, 낮은 최저임금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고용증가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음.
-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대한 결속력이 높을수록 소득 편차가 작아져 노동 소득 불균형을 축소
  - 집합적 임금 합의에 관한 법적 범위의 확대 또한 비슷한 효과를 가짐.
-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증가는 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소득 불균형을 축소
-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이원구조를 완화하는 정책은 임

금격차와 실업률을 감소시켜 소득 불균형을 축소

○ (구조정책) 구조정책은 소득 불균형 정도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은 노동 시간, 직업의 유형 및 분야를 선택에 따른 소득 격차의 상당한 부분을 설명
- 이러한 차이들을 줄이는 정책(예: 아동·보육관련 개선 정책)은 보다 동등한 노동시장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
- 하지만 여전히 성별 소득 차이의 상당 부분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음.

○ (이민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주민보다 이민자들의 고용과 임금이 더 낮음 경향을 보임.

-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는 정책이 소득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조세보다 현금소득이전이 소득 불균형 개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소득 불균형 축소의 75%는 현금소득이전, 나머지는 조세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인 가운데 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조세의 누진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노동관련 조세의 누진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소득 구간별 개인 소득세율의 차이는 점차 감소해옴.
- 더불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세 면제를 확대

- 개인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혜택은 주로 부유층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근로세액공제는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적자본 축적,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대부분의 정책들은 소득 불균형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적 자본의 축적, 평등한 교육기회 부여,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여성 노동 시장 참가 촉진, 교육에 있어서의 성차별 축소 등을 위한 정책인 소득 불균형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음.
- 하지만 집합적 임금 합의에 관한 법적 확장 등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부 정책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노동조합은 임금 분배를 촉진하여 소득 불균형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기업의 시장 퇴출압력 상승 혹은 기업경쟁력이 저하로 인해 실업률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또한, 상위 소득, 재산, 유산 등에 대한 높은 세율은 조세 시스템의 누진성을 증가시켜 근로 및 투자유인을 낮춤.
- 1인당 GDP를 증대시키기 위한 일부 정책들은 소득불균형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남.
  - (예) 관대한 실업 혜택 폐지, 제품 시장의 자유화, 최저임금 하락 등

- 조세왜곡을 낮추는 정책은 성장 인센티브를 높여줄 수 있으나 소득 불균형 해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 주요 논의 내용 >

- 회원국들은 OECD 사무국의 정책제안이 소득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강화, 이민자 및 여성의 노동 시장 정책 강화 등은 소득분배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으며, 근로의욕을 증대시키는 조세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다만, 소득 불균형 정도에 따른 국가별 분류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노르웨이, 스웨덴 표는 동일 그룹에 속하는 국가간에 소득 불균형의 차이가 존재하며, 소득 불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특징을 고려해야함을 지적
  - 네덜란드 대표는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높을수록 협상을 통한 적정 시장임금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미국 대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 불균형과 성장이 반드시 상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
    - 교육 및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확대는 노동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소득 불균형 해소와 동시에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소득 불균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국 자료에 대한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대표는 Gini 계수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
  - 또한, 각 국가별 실증분석 자료의 신뢰성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유의한 정도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
- 아국 대표는 교육수준과 소득 불균형간의 관계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을 지적
  -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흥개도국에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소득 불균형 또한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사무국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현상임.
    -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 불균형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국 대표는 교육수준과 소득 불균형간의 관계는 국가간 비교뿐만 아니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개별국가의 추세적인 변화를 보는 것 또한 중요한 주제임을 지적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책조합 및 국가 간 정책협조가 필요함에 동의
  - 호주, 네덜란드 대표는 거시적 관점에서 일련이 정책조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

-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일련의 정책조합을 실시하는 것은 정책 목표의 달성 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경제 및 사회 구조가 비슷한 국가에서 서로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5. 재정건전화

### <OECD 사무국 주요 내용>

-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상황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주요 재정위기 국가에서는 GDP 대비 5~12% 수준의 재정건전화 작업을 시작
- 재정건전화의 장기목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재의 높은 부채수준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임.
  - 재정건전화는 국가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부채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
  -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목표는 향후 재정정책 기조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경기침체 기간 동안 관성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부채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부채를 2050년까지 GDP 대비 50%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년 상당수준의 재정긴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GDP 대비 10% 이상), 뉴질랜드, 영국, 미국(GDP 대비 7% 이상)은 2012년부터 매년 강도 높은 기초재정수지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동 결과는 GDP 대비 의료 및 장기요양 지출 규모가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인
- 다만 연금지출에 대한 전망결과에 따라 장기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재정긴축 규모는 크게 달라지는데 이는 연금지출이 재정긴축 규모의 약 20%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임.
- 복지지출에 대한 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재정건전화의 지체, 차입비용 증가, 향후 발생 가능한 재정위기 등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긴축 규모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의 재정긴축을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는 경우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

- 현재 발표된 재정건전화 계획이 실행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최대 6%까지 성장률 차이가 발생
  - 신뢰성있는 재정건전화 전략을 마련한 국가일수록 재정건전화의 여지가 높은 반면, 금융시장이 불안한 국가에서는 선택 가능한 정책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임.
  - 재정승수가 작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재정건전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높은 성장률과 낮은 금리가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초재정수지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요한 상황
- 현 상황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지출 및 수입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
- 정책결정자는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단기적인 경기안정, 장기적인 경제성장, 세대 간 균형 및 재분배를 고려해야 함.
  - 과거에 성공한 대규모의 재정건전화는 지출 및 수입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수단에 의해 이루어졌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지출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에 대한 개혁은 장기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사항임.
- 예비저축의 증가는 일시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나, 평균수명 증가 등 항구적인 충격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음.

- 퇴직연령 상승 및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정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지출의 장기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
- 조세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세원을 확대해야 하며,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경우 경제성장률과 조세수입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할 필요
- 환경세, 정부서비스에 대한 요금부과, 부동산세, 금융시장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조세부과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재정건전화를 달성하는 수단
- 재정정책 관련 기관 및 재정준칙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신뢰성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특히 금융시장이 불안한 국가에서는 더욱 필요
- 장기적으로 재정정책 관련 기관을 운용하는 것은 재정정책 기조가 재정건전화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만, 재정기관 및 재정준칙 운용은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정책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음.
  - 재정건전화 정책의 신뢰성은 재정기관 및 재정준칙의 운용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의지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

## < 주요 논의 내용 >

- 회원국들은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재정건전화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견해를 보임.
- 대부분의 EU지역 대표들은 재정건전화를 통한 시장의 신뢰 회복이 경기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정책적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함을 주장
- 미국 대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이 재정건전화보다 더 중요한 이슈임을 주장
  - 미국 대표는 주요 선진국의 채국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이들 국가의 재정여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심각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해석
  -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주요 선진국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다만 유럽의 일부 재정위기 국가에서는 재정건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함에는 동의
- 반면, 독일 대표는 독일, 영국의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어 재정책대가 쉽지 않으며, 재정건전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를 주장
- 다수의 대표들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초재정수지 개선 규모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비현실적임을 지적

- 대규모의 재정긴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재정수지의 개선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
-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수준의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를 추구할 필요는 없으며, 개별국가의 상황에 따라 적정 수준의 정부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아국 대표는 한국의 경우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를 고려할 때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보다 기초재정수지 개선 규모가 더 커야함을 지적
- 보고서의 시뮬레이션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동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더불어 연금지출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50년에 정부부채 규모는 GDP 대비 14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50년에 GDP 대비 50% 수준의 정부부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
  - 다만 현재 한국의 재정여건은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수지는 2013년에 균형으로 복귀할 것임을 발표

-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 등 다수의 대표들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지출구조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에 포함해한다는 아국이 지적에 대해 동의
- 다수의 대표들은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준칙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혁도 동시에 실시되어야 함에 동의
- 스웨덴 대표는 재정준칙 운용이 재정건전화에 기여하였음을 주장
- 네덜란드, 벨기에 등 다수의 대표들은 재정준칙의 운용 및 제도 개혁은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지적
  - 정치적 결단에 따른 재정준칙의 운용은 재정건전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 대표는 재정준칙의 유형 및 운용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재정건전화의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제고한 경험이 있음을 발표

## 참 고

## 우리나라 구조개혁 권고사항 및 이행실적 점검

### ① 네트워크 산업의 규제 완화

- (권고사항) 규제개혁을 통해 진입규제 추가 완화,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등 FDI 규제 완화, 기업환경 개선
- (이행실적) 09~10년도 28개 분야의 시장 진입규제 개선, 위성방송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한도 상한 상향조정(09)

### ② 농업분야 생산자 지원 축소

- (권고사항) FTA 등을 통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가격 지원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 (이행실적) 07년 이후, 유럽연합, 페루, 아세안, 인도 등과 FTA 협약 체결,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금 확대(10년)

### ③ 간접세 비중 확대를 통한 조세 효율성 제고

- (권고사항) 간접세 비중 확대, 직접세의 세원 확대
- (이행실적) 2011 의료·교육 분야의 부가가치세(VAT) 범위 확대

### ④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

- (권고사항) 정규직에 대한 보호 완화, 노동시장 전반의 사회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 인센티브 축소
- (이행실적) 비정규직 교육 훈련 강화

## 5]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지원

- (권고사항) 민간부문 보육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 완화 및 비정규직 차별 축소·성과급제 확대 등을 통한 성차별 완화
- (이행실적) 육아휴직 사용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5개년 계획 발표(10년)